

농업계가 바라보는 한-미 FTA의 파장



손재범 정책실장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1. 한-미 FTA, 왜 문제인가?

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협상 추진

2월 2일 9시 30분부터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공청회는 농민·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속에 무산되었다.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바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의 공식개시를 선언할 방침이라는 것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즉,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의견 반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결정하고 난 후 진행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농민단체는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한-미 FTA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나. 정부가 지금까지 통상협상으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가?

UR협상 이후 2000년에 들어서면서 농업과 관련된 주요 통상협상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다.

2000년에는 한-중 마늘협상에서 이면합의, 2003년에는 한-칠레 FTA, 2004년에는 쌀 협상, 2005년에는 쌀 협상에서 쌀 이외의 부가합의 등등.

농민단체가 농업과 관련된 통상협상에서 정부에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은 세 가지이다. 우선 우리 농업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비해 전방위적으로 개방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농업은 손해만 보아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의견이 배제된 채 각종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협상에서는 각종 저항이 있었으며, 농민은 항상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2월 2일에 개최된 한-미 FTA 공청회는 지금까지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또 다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반목만을 가져왔던 행태를 되풀이하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다. 세계 최대 농업강국, 미국

우리나라가 FTA를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 농업강국이다. 미국 경지면적은 세계 1위, 곡물생산량은 세계 2위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경지면적이 93배, 곡물생산량이 54배, 농축산물 수출액은 33배이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가격의 1/10에서 1/3에 불과하다. 미국 농축산물 수출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가격에 비해 쌀이 22.5%, 쇠고기(냉동)는 27.9%, 사과는 25.2%, 대두(콩)은 8.8%에 불과하다. 소농구조인 우리 농업은 대규모 영농국가인 미국과 전혀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개방을 목표로 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정부를 농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 미국에 구걸하여 얻은 굴욕협상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 체결이 시기상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 요구하는 4개 분야(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시장개방 양보카드를 제시하여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크린쿼터 문제에서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03년 말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된 쇠고기를 수입재개하기로 하였다. 또 자동차는 미국이 차량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지난 해 말 극비리에 3년간 유예를 결정하였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가산정 제도 및 방식을 선진화하자고 미국이 요구하자 전향적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설령 자유무역협정이 시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4개 분야를 내어 준 것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4대 분야를 협상 전에 일괄타결 해 줌으로써 향후 협상단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협상 시작 전에 무장을 해제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자 미 의원들은 4대 선결조건 이외에도 ▲ 쌀 시장 개방 ▲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 모든 종류의 쇠고기 시장 개방 ▲ 담배광고 제한 문제 ▲ 환율 조작 등 무차별적으로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매달려서 시작한 FTA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협상을 2007년 3월까지로 규정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공세적인 미국과는 달리 방어적이고 체결을 희망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협상 내용이 국내에서 받기 어려울 때라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협상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개방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마. 예고되는 부실협상

2007년 7월에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때문에 협상은 2007년 3월에 끝내야 하며, 막대한 협상조문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실질적인 협상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에 실질적인 협상기한은 약 7개월에 불과할 것이다. 2004년에 시작한 쌀 협상도 약 10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외분야 없이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이 기한에 타결한다는 것은 부실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부실협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칠레 FTA는 3년, 한-싱가포르 FTA는 협상 전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 연구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무관세를 지향하는 FTA협상을 개시하는 나라로서는 사전 준비과정이 너무나 부실하였으며, 학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바. '득'보다 '실'이 많음

첫째, 한-미 FTA는 세계적인 대세인가?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호주·캐나다·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중동과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이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농업부문의 피해가 너무 커 FTA 사전 협상단계에서 추진을 포기하였는데, 미국은 스위스 전체 수출 중에 11%를 차지하는 제2의 수출시장이다. 일본 또한 미국과 FTA는 자동차 분야에서 이점이 있으나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추진을 보류하였다. 일본은 태국과 한국이 대미 FTA 체결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즉, 한-미 FTA는 세계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서 모두 다른 것이다.

둘째, 한-미 FTA는 경제적 효과가 있나?

미국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은 1.5%, 우리나라는 7.2%이어서 관세 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

출 증대효과는 미미하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휴대전화는 고급품이기 때문에 관세율은 큰 문제가 아니다. 최근 자동차 수출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생산기지가 많이 확대되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바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섬유 부문은 한-미 FTA 체결로 수출증대효과가 있으나 중국산 섬유에 가격 경쟁이 되지 않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향후 우리경제의 주동력이 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값싼 멕시코에 공장을 이전하고 가격 경쟁 효과를 노렸으나 결국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였다. 이는 기술개발 등 질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FTA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미 무역수지가 최대 51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출은 54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9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은 71억 달러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은 12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미 FTA 타결 4년 후 한국 무역수지(서비스업 포함)가 89.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넷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농업분야는 UR농업협상 타결 이후 도농간 소득비, 농가부채/농가소득 등 농업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도농간 소득비는 1994년 99.5%에서 2004년 77.6%으로 악화되었고, 농가부채/농가소득 비율도 1994년 38.8%에서 2004년 92.7%로 악화되어 농가경제여건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취약한 농수축산업 분야는 일차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타 산업에 비해 극히 취약한 농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협상 중인 DDA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 부문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외국인 직접투자와 고용증가는 허울이다.

정부는 한-미 FTA효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고용 증가, GDP가 약 2%로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고용 증가는 캐나다, 멕시코의 대미 FTA 체결 사례에서 보듯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실업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GDP 상승과 서민생활과는 연관이 없는 경제 체제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일반 서민들 생활이 좋아지지 않았으며, 수출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가는 구조가 되었다.

2.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피해는?

가.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가공제품 포함)은 총 생산액의 3.7%인 2조3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축산물로서 9,031억원이 감소하여 기준년도(2001년) 대비 14.5%가 축소되었다. 채소·과일류 생산액은 2,559억원 감소하여 기준년도 대비 2.9%가 축소하였으며, 곡물류 생산액은 2,579억원 감소하여 기준년도 대비 20.1%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쌀을 포함한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이 8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쌀 생산액은 3,000억원, 육류 생산액은 240억원, 과일·채소류 생산액은 1,360억원, 낙농제품 생산액은 1,37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생산액 감소 규모가 다른 국가와 FTA 체결하는 경우의 17배 이상이다.

나. 축소된 피해예상액

그러나 농업분야 피해 2조원은 쌀 제외, 곡물·유지작물 관세율 감축을 50%로 전제한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다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즉 농업생산과 농업고용 감소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 외 전반적인 피해로 확대될 것이다. 협동조합 기반 약화와 농관련업계 피해(사료, 농자재 등)가 있으며, 농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자산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 빈민화된다면 농촌 황폐화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다.

다.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는 불가능

이번 FTA를 DDA농업협상과 연계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

위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농업총소득은 8조3천억 원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고용 감소 및 농촌 붕괴

농업생산량의 막대한 감소는 고용인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부문 고용이 최대 14만 3천명 감소하여 농업부문 취업자가 6.2%가 실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고용 감소는 상이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전망한 농업생산 감소액(8.8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농업부문은 5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농가인구가 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여기에만 그칠까? 농촌 고용 감소의 질적인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 부문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UR협상 이후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현장에서 이농 또는 고용감소는 젊은 영농세대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농촌지역 붕괴, 농업후계세대의 단절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열심히 농사지을만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 갈수록 농사지을 사람은 더욱 더 없게 될 것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실업자와 그 가족은 도시 빈민화 되기 쉬우며 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3. 한-미 FTA, 국민 동의 없이 진행할 만큼 급한가?

우리나라 농민은 UR협상 이후 계속되는 개방 문제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얼마 전 쌀도 10년간 유예하였지만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시판됨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는 핵폭탄과 같은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를 추진하기로 정부가 결정된 이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학계는 한-미 FTA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최소화한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이전에 해야 하지 않았을까?

미국은 협상 개시 선언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상의 목표와 내용, 전략 등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법·제도와 시스템을 배워보겠다는 정부는 이것은 왜 닦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통상협상의 비밀주의와 비민주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점에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